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

2013. 3. 27

#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1. 연구포럼 개요

- 기간: 2013년 3월 27일(수) 14:00~17: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대상: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부문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및 종사자, 관련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 2. 연구 포럼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
- 협동조합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충남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 3. 행사순서

14:00~14:05	개회사	박진도
14:05~14:10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소개	김종수
14:10~14:50	발 표 1.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정체성과 과제 -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김기섭
14:50~15:30	발 표 2.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승옥
15:30~15:40	휴 식	
15:40~17:00	종합 토론	송두범

## 4. 포럼 전체일정

- 매주 수요일 진행을 원칙으로 함.
- 행사장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공주시 연수원길 73-26)
- 문 의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춘섭 연구원  
(전화 : 041-840-1217, 이메일 : jacobp73@cdi.re.kr)
- ※ 발제자 사정에 따라 요일, 시간, 장소 및 주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회 차	일 시	내 용
1	2/13	·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 새로운 경제전략의 가능성
		· 협동조합과 지역운동
2	3/6	·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특징과 당면과제
		· 한국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지역사회기여
3	3/13	· 농협 개혁의 주요내용과 한계
		· 농협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4	3/20	· 지역농협의 개혁사례 : 안성 고삼농협
		· 지역농협의 개혁사례 : 괴산 불정농협
5	3/27	· 생활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과제
6	4/10	· 신협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사례발표 : 논골신협
7	4/17	·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사례발표: 대구 원대새마을금고
8	4/24	· 협동조합사례 : 이탈리아 트렌토사례
		· 협동조합사례 : 캐나다퀘벡 사례
9	5/1	· 기존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간 갈등 및 문제점
		· 기존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간 협력방안

# 목 차

## 발 표

###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정체성과 과제

김기섭 대표(파프리카 인터내셔널) .....1

###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승욱 대표(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16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발 표 1.

#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정체성과 과제

## -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

김 기 섭

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정체성과 과제

## —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

김기섭(파프리카인터내셔널 대표)

### 1. 생협의 태동

생협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도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흘러간 지금,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생협을 왜 했는지, 생협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들추는 것이 부질없는 일인지는 몰라도,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생협운동이 지녔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갈 방향을 찾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모아본다.

생협이 태동한 1980년대는 매우 다이내믹한 격동기였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7~9%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국민 대다수의 생활은 물질적 풍요를 구가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물질이 개벽한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의 대가 또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제대로 된 먹을거리를 찾아 직접 소비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생협을 태동시킬 주체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80년대는 매우 급변하는 격동기였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으며 그나마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팔기

위해 자유무역을 확대해간 대가로, 우리나라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했다. 80년대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90년대의 ‘세계무역기구’(WTO), 2000년대의 ‘자유무역 협정’(FTA) 등이 그 결과이다.

이런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이제는 무슨 농사지어도 편안히 살 수 없는 그런 농업과 농촌으로 변모해갔다. 생산자들은 더 이상 정부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을까를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생협을 태동시킬 또 한쪽 주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 2. 생협의 특징

협동조합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은 그 구성원과 하는 일은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개별적으로 시장을 상대로 했을 때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이 힘을 모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시장과 거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적’ 의미에서의 생활협동조합 또한 개별적으로 시장을 상대했을 때 약자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소비자들이,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농협과 생협은 분명 한쪽은 농민이고 한쪽은 소비자이며, 한쪽은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이고 다른 한쪽은 소비재의 구매인 점에서 그 구성원과 활동 내용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대표적인 두 협동조합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하나는 농협이든 생협이든 시장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협이든 생협이든 자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시장의 건너편에 있는 상대와는 경쟁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협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실은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대변하려 했기 때문에,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과 반하게 되고 또 소비자의 이익은 생산자의 이익과 반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통적 협동조합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협동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경쟁한다. 그 이유는 전통적 협동조합이 시장 안에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져 왔던 이런 지금까지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80년대에 이 땅에 태동한 생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한쪽에서는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 속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바람과, 다른 한쪽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황폐화 속에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산자의 바람이 서로 만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의 전통적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만났고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만났는데 비해, 80년대에 새롭게 태동한 생협에서는 생산자끼리 만나고 소비자끼리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나라 생협이 전통적 의미의 협동조합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정체성과 지향을 낳는 요소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 태동한 생협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났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난다. 하물며 기존의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경우도 시장을 통해서 생산자 혹은 소비자와 만난다. 그런데 30여 년 전 새롭게 태동한 생협 만큼은 유독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났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직거래’라고 부르는데, 이 직거래야말로 우리나라 생협이 지니는 매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세 번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무엇을 직거래했느냐 하면 바로 ‘생활재’를 직거래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 유통하는 재화를 ‘상품’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 생협에서는 그것을 ‘생활재’라 부른다. 하물며 기존의 전통적인 농협이나 생협에서도 쓴 적이 없는 이 ‘생활재’라는 말을, 왜 유독 30여 년 전 이 땅에서 태동한 생협에서는 쓰게 되었는지, 또 생협은 ‘생활재’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생협이 지니는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말이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났다’는 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났다는 점, 셋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생활재’를 취급했다는 점. 이 세 가지야말로 80년대 이 땅에 새롭게 태동한 생협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특징이 아닐까 싶다.

### 참조1. 우리나라 생협의 태동 과정이 지니는 특징

소비자	생산자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산자의 바람과 소비자의 바람의 만남	

### 참조2. 우리나라 생협의 특징

- ① 조합의 운영 방식 : 출자/운영/이용의 삼위일체, 생산자의 운영 참여
- ② 물품의 공급 방식 : 직거래, 무점포(공동구입 → 지역 커뮤니티 센터형 소형 매장)
- ③ 가격의 결정 방식 : 생산 원가 보장, 연중 고정 가격, 생산자-소비자 협의

### 참조3. 서구 소비협동조합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생협

서구의 소비협동조합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
결집된 구매력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에 중점	상품 자체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추구에 중점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여전히 경쟁적 대립적	직거래라는 대면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협의의 시스템 마련
조합원과 조합원간 관계가 조합을 매개로 하는 무명의 관계	직접적 대면의 관계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조합원의 일상적인 참여
‘시장에 대한 수정’ 운동	‘대안적 시장의 마련’ 운동

### 3.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났다

먼저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바람과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산자의 바람이 만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보통의 경우 세상은 한쪽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나의 이익은 곧 너에게는 손실인 법이고, 생산자에게 이득인 것은 소비자에게는 손해이기 마련이다. 나와 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분명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자들은 기존에 해왔던 간편한 관행농법에서 힘든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안심하고 농사짓기를 바라는 생산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은 그 생산물에 비싼 제값을 쳐줘야 한다. 한쪽의 바람이 충족되기 위해 다른 한쪽이 일정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생산

자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안심하고 농사짓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그런 호혜적 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어야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본다. 시장은 한 번도 이기적 인간을 나쁘게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을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편견을 준다. 시장은 개개인의 이기심이 지금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낳았다고 강조한다. 덕분에 우리는 한편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이기적이 되도록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그런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서는 내가 원하는 바도, 또 다른 이가 원하는 바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한다면 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이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내가 안심하고 농사짓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이런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적정선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

불교에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이 있다. “내게 이로운 것이 다른 이를 이롭게 한다”, 나아가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내게도 이롭다”는 뜻이다. 이 말은 그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지금의 사회는, 한쪽에서는 자기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이기적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이타적 인간이 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세상이 촌촌한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인간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안적 삶은, 자리(自利)가 이타(利他)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타(利他)의 과정에서 자리(自利)를 얻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80년대에 이 땅에 새롭게 태동한 생협이 가장 큰 특징이다.

#### 4.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났다

다음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얻거나 자연을 변형 가공해서 소비한 다음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생산→소비→분해→생산→ ...’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통해 생존해간다. 이를 우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라 부른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안에는, 그보다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가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질 대사는 생산과 소비의 분화, 생산과 생산의 분업에 따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환 관계를 말한다.

생산과 소비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생산물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시장’이라 부른다.

물론 시장은 지금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은 일류가 소위 문명이란 것을 열기 이전부터 사람 곁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시장의 힘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시장은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의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사회의 일부로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바로 사회이다. 사회의 일부로서 시장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사회가 지배받고 있다.

‘사회’란 한 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만남이다. 또 ‘시장’이란 한 마디로 물건(서비스)과 물건(서비스) 사이의 관계이고 만남이다. 물건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중에 더 소중한 것이 사

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지금은 물건의 관계에 의해 사람의 관계가 지배받는 사회이다.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여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나아가 그 가치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교환에 의해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지배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해서 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물건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생협의 직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하고는 다르다. 매매(賣買)는 생산자가 돈[貝]을 벌기 위해 그물[𧯃]에 내놓으면[土=出], 이를 또 소비자가 돈[貝]을 벌기 위해 그물질[𧯃]하는 관계이다. 이에 비해 거래(去來)란 말 그대로 ‘가고 오는 것’이다. 무엇이 가고 오느냐 하면 돈이 가고 오고 또 물건도 가고 오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고 온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고 옴에 따라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물건이 가고 오고, 그런 물건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책정해서 돈도 가고 오는 것이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것’이 맞다.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는 관계는 시장에서의 교환인 반면, 가는 것이 있어 비로소 오는 것도 있는 관계가 호혜, 즉 직거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팔고 사는 매매(賣買)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시장에서의 교환에 의해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지배받는 사회이다. 직거래란 이런 시장과 사회의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 기초해서 물건을 관계하는 것이며, 물질의 개벽 시기에 정신과 관계를 개벽하자는 것이다.

#### 참조4. 직거래의 3대 원칙(예)

- ① 생산지와 생산자가 명확할 것
- ② 재배 및 사육방법(농약, 화학비료, 사육 등)이 명확할 것
- ③ 조합원과 생산자가 교류할 것

#### 참조5. <유통의 기능>을 통해 본 시장 유통과 생협 직거래

유통의 기능	차이	시장이 지향하는 차이의 연결	생협이 지향하는 차이의 연결
수송과 가공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공간의 차이	대규모 소비지 + 대규모 생산지 = 대규모 운송 <b>글로벌 식품</b>	지역 생산 + 지역 소비 = 지역내 혹은 지역간 연계 <b>로컬 푸드 (local food)</b>
보관과 가공	생산시기 와 소비시기 가 다른 시간의 차이	에너지 다투입형 시설재배 + 성장촉진제와 보존료 등의 남용 <b>페스트 식품</b>	노지재배한 제철 농산물 + 손으로 만들어먹는 음식 <b>슬로우 푸드 (slow food)</b>
판매와 구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의 차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간극의 확대 + 제도화된 인증과 규제의 강화 + 기업이 제공하는 식품 <b>농기업 식품</b>	생산자와 소비자간 다양한 교류 + 생산자에 의한 자발적 정보 공개 + 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생산 점검 <b>시빌 푸드 (civil food)</b>
	총칭	글로벌 + 페스트 + 농기업 식품 = <b>농식품기업(agri-business)이 주도하는 세계화(globalization)</b>	로컬 + 슬로우 + 시빌 푸드 = <b>복합이해당사자(multiple-st akeholder)의 참여에 의한 세계지역화(glocalization)</b>

## 5.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생활재를 취급했다

세 번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 ‘생활재’를 취급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생산된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상품’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이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기능을 담아 눈가림한 프리미엄 상품, 첨가물을 남용해 보기 좋게 만든 가공식품,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이 된 농산물, 공장식으로 사육된 축산물 등이 범람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또 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입하게 된다.

생협에서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상품이라 하지 않고 ‘생활재’라 부른다. ‘생활에 필요한 소재’라는 뜻이다. 상품이라 하지 않고 생활재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다른 이의 손을 빌어 생산되기는 했어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팔기 위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활재라 했을 때, 생활재의 ‘재’자가 재(財)가 아니라 재(材)라는 사실이다. 재(財)는 존재의 가장 근본이 돈[貝]에 있음[才]을 가리키는 반면, 재(材)는 존재의 근본이 나무[木]에 있음[才]을 가리킨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생활재(生活財)는 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여전히 돈을 중심에 둔 물건인 것이고, 생활재(生活材)는 돈과는 상관없이 물건 자체에 깃든 생명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상품에서 생활재(生活財)로, 다시 생활재(生活財)에서 생활재(生活材)로의 변화를 물건이 지니는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에서 중요한 가치는 ‘교환가치’이다. 교환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드주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돈을 벌어드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이때의 소비자는 단지 이익을 안겨다주는 ‘멍청한 소비자’일 뿐이다.

상품에서 생활재(生活財)로 나아갔을 때, 가치의 기준은 교환가치에서 ‘사용가치’로 변한다. 사용가치란 얼마나 생활에 유용한 물건이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는 현혹의 대상에서 간간하고 현명하며 합리적인 ‘똑똑한 소비자’로 바뀐다.

상품에서 생활재(生活財)로 나아간 것처럼 생활재(生活財)에서 다시 생활재(生活材)로 나아갔을 때, 가치의 기준은 교환가치에서 사용가치를 넘어 다시 ‘생명가치’로 변화한다. 얼마나 생명이 깃들여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생명은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생명이 깃들여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한 물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혹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품이냐 하는 사용가치적 판단을 넘어, 한 물품이 얼마나 다른 생명과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담고 있느냐, 혹은 이를 더욱 고양시키는 물품이냐가 그 물품을 바라보는 생명가치적 판단이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소비자는 똑똑한 소비자에서 ‘(생명을) 기르는 소비자’로 변모한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품과 생활재(生活財)와 생활재(生活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얼마 전에 우리는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을 겪었다. 300여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땅속에 파묻혔다. 구제역은 한 마디로 가축의 독감이다. 건강한 가축이라면 며칠 밥을 굶기는 해도 대부분 낫는다. 하지만 전염성이 높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이유로 건강한



가축마저 땅에 묻혀버리는 신세가 되었다. 소비자의 간간하고 현명한 선택이 수백만 가축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키우던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모습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교환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축을 키웠던 농가는 시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어 오히려 돈벼락을 맞았다고 기뻐한다. 사용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축을 키웠던 농가는 아쉽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우려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축처럼 소 돼지를 키웠던 농가는 식음을 전폐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어떤 이유로 같은 상황에서 이렇듯 다른 농가의 모습이 드러날까? 그것은 다름 아닌 키우던 가축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때문이다. 돈으로 바라보느냐, 먹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가축 자체를 생명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가축의 사육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장식 사육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구제역 같은 대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것은 유기농업의 기초일 뿐이지 유기농업의 전부가 아니다. 유기농업은 생명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깨닫고 이를 더욱 조장(助長)함으로써 생명을 더욱 생명답게 유기적으로 관계하게 하는 데 그 기본 방향이 있다. 결과물의 안전성 여부가 유기농업의 전부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유기농산물이라는 결과를 내놓기 위한 유기농업은 진정한 유기농업이 될 수 없다. 결과는 목적을 향해 과정을 제대로 밟아갈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생협이 그 취급하는 생활재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생협의 생활재는 사용가치의 극대화가 그

중착점이 아니라 생명가치의 발현이 궁극적인 지향이라는 사실이고, 생명가치의 발현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농부 가운데 어느 농부의 소가 가장 안전할까? 그리고 이런 농부의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한다면 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이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의 관계에 기초해서 물건을 관계하는 것, 생명을 더욱 생명답게 유기적으로 관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특징이고 생협을 통해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호혜의 관계를 맺고, 그 호혜 관계에 기초해서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 재화를 직접적이고 대면적으로 거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생협운동이 지니는 정체성이고 특징이다. 초창기 어려웠던 시기에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생협이 지닌 이런 정체성과 지향이 나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일종의 사회적 불을 형성하게 한 이유도, 그런 속에서 생협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되돌아봐야 한다. 왜 무엇을 위해 사람들이 생협을 했는지, 생협을 일궈온 것이 자본이나 시스템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인지에 대해.

## 참조6. 생협의 생활재 개발과정(예)

- ① 조합원에 의한 요구(조합원)
- ② 개발 타당성 조사(사무국)
- ③ 1차 시제품 생산(생산자)
- ④ 시제품 검토와 분석(조합원+사무국)
- ⑤ 2차 시제품의 생산(생산자)

- ⑥ 시제품 검토와 분석(조합원+사무국)
- ⑦ 결정 (조합원)
- ⑧ 생활재 이용 집중(조합원)
- ⑨ 지속적인 품질관리(사무국)
- ⑩ 보다 나은 생활재로의 개선(조합원)

### 참조7. 시장 상품과 생협 생활재

	기본성격	품질기준	가격	정보 공개	품질평가	마케팅	소비자의 주체성
시 장 상 품	교환(사용) 가치 추구 이윤 추구	유행/패션 단기성	독점 가격 관리 가격	부분 공개 (영업 비밀)	시장의 목소리 적량 분석	예측 호소 감각	수동적 외래적 개별적
생 협 생 활 재	사용(생명) 가치 추구 필요 충족	실용/안전/경제/ 생활 장기성	적정 가격 공정 가격	전면 공개	조합원의 목소리 적성 분석	예약 이성/ 합리 인격	능동적 참여적 집단적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발 표 2.

##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 승 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연합회 대표

# 한국 협동조합운동과 국가, 지역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 1. 관제 협동조합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협동조합은 관제 협동조합이었다. 식민모국은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치기구로서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관제 어용 조직으로 만들어 이용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 또한 개발독재 체제를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농민 통제 기구로서 관제 어용조직으로 활용했다.

한국의 농협 또한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가 만든 관제 협동조합이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기존의 농협과 농업은행을 강제로 통합하여 종합 농협을 만들었다. 군사쿠데타 세력은 단위조합과 시군조합, 중앙회 임직원을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농민을 감시하고 착취하던 총독부 관제조직이었던 금융조합과 식산계, 산업조합, 대한농회에서 일하던 친일 부역자들을 임명해 채워 넣었다. 이는 군사정부의 종합농협 설립 목적이 일제와 똑같이 농민 통제와 수탈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일제 치하의 농협운동은 1907년의 지방금융조합을 필두로 이후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 등에 의해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식민지 시대 농협운동은 식민지 예속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인들 스스로 벌인 경제 자립운동이었으며 민족운동이었다. 당연히 일제의 극심한 탄압 아래 1930년대 중반부터는 해산되고 말았고 협동조합 운동의 이념과 운동 흐름은 지하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협동조합운동은 주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우익인 대한독립농민총연맹 또한 협동조합운동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전진한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농민후생조합을 조직하는 등 활발하게 협동조합 운동을 벌였을 정도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 속에서 자유인들의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이 남과 북 모두에서 우후죽순으로 솟아올랐던 것은 토지개혁과 함께 그만큼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농협은 국가가 임원을 임명하지는 않고 있다. 조합원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민선 농업협동조합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부 지역농협을 제외하고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농민의 고향을 빨아 배를 채우는 흡혈귀 임직원들의 협동조합으로 전락해 있다.

## **2. 문제는 내면화된 부국강병과 국가주의이다**

### **- 국가주의와 협동조합운동**

국가는 태생부터 늘 국가주의로 치닫는 경향을 유전자로 갖고 있다. 국가는 국가 교육 기관을 통해 국가주의를 어릴 적부터 인민들에게 세뇌시킨다. 국가와 국가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인민의 공복이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라는 환상과 망상을 심어놓는다. 자본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건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 파시즘과 구소련, 북한 등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중앙집중의 권력 국가로 나아가 결국 수많은 자립자치의 협동조합을 분쇄하고 그 자리를 어용 협동조합으로 대체한 것은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사실 협동조합운동을 기반으로 일어난 혁명이었다. 당시 협동조합 조합원은 30~50%로 추정되고, 미르 공동

체의 농민들을 합하면 러시아 인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그런데 네프 정책은 이런 협동조합을 없애고 국가가 권력을 쥐고 경제 성장과 개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제동원형 국가경제로 나아가고 말았다. 북한 역시 이런 소련식 국가경제 체제로 나아가고 말았다.

한국의 국가는 남북 공히 일본제국주의 국가의 강한 국가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대결 상황은 국가 이외 시민사회와 풀뿌리 공동체를 불온시하고 아예 싹을 잘랐다. 유격대국가, 병영국가는 이런 국가의 표현이다. 부국강병의 국가주의는 자립자치의 민간 영역을 암세포처럼 자르려 한다. 사실 국가야말로 시시때때로 암세포로 돌변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늘 협동조합운동에 개입 통치하려 했다. 한국의 신협운동 역사는 바로 이같은 국가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부산의 성가신용조합과 서울 가톨릭중앙신용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신협운동의 산파였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지만 캐나다의 안티고니시운동을 모델로 인민의 경제 자립운동으로서 신협운동을 시작했다.

안티고니시운동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읍 단위 마을인 안티고니시 지역에서 일어난 협동조합운동을 말한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심각한 불황이 밀어닥쳤을 때,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줄었다. 당시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의 코디 교수와 톰킨스 교수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동가 양성을 시작으로 안티고니시를 협동조합의 도시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안티고니시를 비롯한 노바스코샤 지역은 캐나다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 협동조합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1950년대의 협동조합 모델은 안티고니시 협동조합운동이었다.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1957년 12월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서 2개월 동안 안티고니시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1959년 2월 부산 메리놀 수녀회에서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방법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운크라 고문 3명과 주한봉사단체협의회(KAVA) 회원 등 18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사목을 주로 하던 장대익 신부 또한 1957년 9월부터 1년 동안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 유학을 가 신용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배웠다. 귀국 후에는 서울교구의 후원으로 1959년 8월 소공동에 사무실을 열어 서울교구와 인천교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소개와 교육 활동을 계속했다. 이때 장 신부가 서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협동경제연구회 사람들을 만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협동경제연구회는 평양교구 소속의 월남 신도들이 신용조합을 빈곤 타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연구 소개하기 위해 1959년 11월 20일 만든 모임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신협은 불특정 대중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부조하는 조합’이라는 신협의 공동유대 정신 아래 출범했던 것이다. 1960년대 신협의 대부 금리는 연 1.5~3%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대부받는 사람의 ‘정직성과 좋은 인격’이었다. 대출금은 반드시 지정 용도로만 써야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되빌려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부금 용도가 고리채 정리, 가옥 수리, 자녀 학자금, 전세금 마련 등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신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름아닌 고리채 정리였다. 신협은 이 고리채 정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 신협 지도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 활동에 헌신했던 초기 신용협동조합운동 활동가들의 노력이야말로 신협운동의 성장을 이끈 밑거름이었다. 당시 이사회는 물론 회계와 서기 등 모든 임직원



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오늘도 없었다.

1972년 신탁법의 제정과 함께 순수 민간 자율 결사체였던 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정확히 법 제정 이후부터 한국의 신탁운동은 정부의 관리 통제 기도에 맞서 끊임없이 자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신용협동조합법과 법인격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가의 지배 개입과 관리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인민의 자율과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운동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신탁법 제정과 동시에 당시 재무부는 정관 제정과 개정, 인가 기준부터 업무영역, 이자율, 등기, 각종 세금문제까지 행정명령인 ‘지침’을 제시하면서 신탁을 통제하려고 했다. 1973년 3월 24일 서강대에서 277개 조합의 대의원이 참석해서 신탁연합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때 연합회 회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자는 주장과 순수 신탁인이 신탁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틀 동안 논쟁한 것도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당시 박정희 유신헌정은 영등포산선 신탁에 대해 신탁법에 따른 감사권한을 이용하여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아예 해산 명령을 내려버린다. 국가가 협동조합을 해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영등포산선 신탁은 다람쥐회를 조직하여 신탁운동의 초기로 돌아가 그야말로 순수 민간 결사체로서의 상부상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신탁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1983년에 성립신탁 8억 7백만원, 신정신탁 10억 2,400만 원 규모의 내부자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합회 본부와 서울지부에서도 회계 사고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연합회관 구매과정의 부정 사건까지 불거져 나왔다. 위장대출, 예탁금 횡령, 부외거래, 조합명의 당좌발행, 상호보증대출

등 이사장의 전횡과 임직원들의 방조, 조합원 의식 결여가 뒤엉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같은 대형사고는 1980년대 들어 한국에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정책, 이른바 규모화, 합리화 정책을 취하면서 조합이 대규모화되고 조합원 교육이 경시되기 시작하면서 협동조합 이념이 상실되는 현상과 동전의 양면으로 터져나온 일종의 협동조합 정체성 일탈의 결과물이었다.

회계부정 사고는 곧바로 재무부와 은행감독권의 감사에 뒤이은 정부 감독의 강화를 불러온다. 결정적인 사고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터지고 만다. 1997년 8월 조합원 수 500만 명 돌파에 1,700여 개에 육박하던 한국의 신용협동조합들은 그 직후 몰아닥친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 아래 수많은 신탁이 망해서 문을 닫고 말았다. 이른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신탁들은 이후 더더욱 제2금융권 기관으로 제도화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의 신탁은 협동조합의 생명인 자율과 자치, 자립의 정체성은 짝 옥죄어 숨을 못쉬고, 국가의 통제에 길들여진 관제 협동조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되찾는 신탁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 **3.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하는 운동, 협동조합운동**

#### **- 국가와 민주주의, 지역공동체**

오늘날 민주주의는 어떤 용례로 사용되건 그 본질이 인민주권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인민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주권 재민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주의(이즘ism)가 아니라 인민(데모스)의 통치(크라시), 즉 왕이나 대통령이나 기타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 인민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인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일꾼들을 인민들이 직접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행정부 공무원과 경찰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당연히 이들은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된다. 아무리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에 명시해 놓아도 말짱 헛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의 몽둥이이고 인민들을 물어뜯는 대통령의 충견들이다.

현대 국민국가에서는 대체로 인민의 주권을 선거 절차를 통해 위임하는 위임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행정권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 치르는 선거를 통해 위임해 준다. 그리고 이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대통령, 도지사, 시장은 4, 5년 동안 입법권과 행정권의 전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은 위임 절차도 없이 사법 관료가 독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민의 사법 주권은 인민도 모르게 강탈당한 채 사법 관료 독재의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오고 있는 셈이다. 법전만 달달달 외워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출세가 보장된 사법 관료로서 인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한국의 사법 제도이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 권력은 거의 제동 장치도 없어 수많은 민주주의 관련 판결도 사법 관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전혀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법 관료의 부패와 부정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 모든 일이 인민 주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사법 주권을 인민들이 강탈당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들의 사법주권을 강탈해간 도둑은 다름아닌 미군정이다. 해방 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일제 총독부를 이어받아 미군정을 실시했고, 이 때 남한을 점

령 통치하는 데 일제 식민지 관료를 그대로 재등용했다. 미군은 조선인을 자치 능력이 없는 미개한 민족으로 적대시하고,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일본인을 문명인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한 인민을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사법 주권을 남한 인민에게 주는 제도는 배제하고 강력한 경찰과 검찰을 통한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다시 권력을 쥐게 된 친일 민족반역자들은, 특히 사법 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는 따위의 헌법 절차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바이마르 헌법을 전범으로 미국의 사법 체계를 도입해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인민의 사법 주권을 위임 절차조차 없이 사법 관료에게 넘겨준 것은 이처럼 당시 미군정이라는 해방 이후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 권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암세포 권력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한국에서 선거는 요식 행위일 뿐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소비에트연방의 특권 지배 계급이었던 노멘클라투라와 똑같이 임기가 보장된 특권 관료 계급이다. 입법부 권력은 그나마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교체되기라도 하고 적어도 4년에 하루는 인민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국의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세무서 등을 보면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레임덕이 다가오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들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다. 결국 이들이야말로 퇴임한 대통령을 비극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범죄자들에 다름아니다.

인민의 권력을 탈취해간 이들 권력 찬탈자들에게서 인민의 권력을 되찾아 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면 인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냐 하는 기준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협소한 제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지방 자치, 지역 공동체의 자치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있다.

국가는 지방의 연합, 즉 연방으로서 필요한 만큼만 권력이 주어지면 되고 기초 공동체의 권력은 가능한 만큼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민의 직접 정치,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3권 분립, 선거, 대의제 같은 몇 가지 제도가 아니다. 4년마다 한 번 주인이 되는, 그것도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니라 대규모 언론 매체의 조작된 이미지에 따라 수동의 객체로서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라는 환상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와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민주주의의 근거지는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추상의 정신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거지는 또한 좋은 대통령이나 좋은 정부, 즉 국가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근거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립 자치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면 흔히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용인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다. 사실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 전체주의 질서나 엘리트 독재 질서에 갇히게 될 위험성은 늘 있다. 그러나 지역 자치 공동체와 국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 공동체는 철저한 자유인들의 연합체이다. 에너지-식량을 자립하는 자치 공동체는 국가와 달리 그 규모가 지역으로 국한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공동체란 국가의 신분제나 계급제의 강한 억압 아래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치 공동체도 아니다.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치 공동체도 아니다. 평등과 자유가 없다면 공동체는 감옥일 뿐이다.

경찰과 군대, 공무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고 인민의 생활은 더 나아진다. 사실 경찰, 군대, 공무원 같은 제도보다 더 좋은 것은 인민 스스로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여기로부터 비롯된 애국심 그리고 인민 스스로의 질서와 통제, 자립 자치이다. 스위스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공동체 자체의 자원봉사로 충분히 가능하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투철한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인민이며,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은 인민들의 자치가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이렇게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하는 인민들 스스로의 민주주의 탈환운동이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해지는 이 때문이다.

#### **4. 협동조합의 정치와 국가**

단순히 협동조합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과 자치, 자립의 협동조합운동에 머물러서는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을 지속가능하게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언제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히틀러와 스탈린을 키워낸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정치화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파시즘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몰락하고 만 것은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만든 관제 협동조합을 비판하기에 앞서 협동조합운동은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이 만든 국가, 즉 국가 자체를 공동체가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 국가로 만드는 정치운동을 해야만 한다. 국가를 협동과 상생의 협동조합 국가로 만들어야만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운동은 지속가능해 진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진보정치 운동은 그동안 지역공

동체의 재조직이란 범주와 의제가 없었다. 한국의 진보운동과 민주화 운동은 늘 국가권력의 민주화에 멈춰 서 있었고, 시민사회운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이나, 재벌을 활용해야 한다는 등 기가 막히는 재벌 논쟁을 보라.

이것은 생협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보면 바로 이웃에 매장을 내 경쟁을 하는 생협의 행태는 협동조합들끼리 협동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짓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쟁을 소비자주권론이나 생협의 성장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면 이는 자해의 논리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국가주의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바꾸는 변화와 전환의 운동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 종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협동조합 경제는 지속가능한 풀뿌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 협동사회 경제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또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력을 풀뿌리 지역주민들이 탈환하는 운동이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국가 중심의 정당운동이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서울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당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중앙당이 창당되고 그리고 이어 지구당이 창당되면서 술한 정치 지망생들이 입후보하는 통로로써 활용되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흩어지는, 그런 한국 정당정치의 상투적인 반복이 지금도 되풀이해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 보수정당보다 더 귀족화하고 기득권화된 진보정당이 권력의 떡고물을 놓고 추잡하고도 역겹기 그지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가주의 정당정치, 포말정당과는 전혀 다르게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이 협동조합운동의 정

치이다. 이것은 서구의 정당정치, 녹색당의 정치운동과도 전혀 결이 다른 성격의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6.8혁명 이후에 대체로 이전의 구 사회운동과 전혀 다르게 신 사회운동이 대두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반핵과 골프장 반대, 공해추방운동에 동의하고 함께 해왔다.

한국의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은 최소한 반핵을 중심으로 한 녹색의 생태가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인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시 탈환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가치, 국가 복지를 포함하되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공동체복지 가치, 그리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 질서를 모색하는 평화의 가치 등등 녹색, 풀뿌리 민주, 공동체 복지,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역에서 함께 하는, 협동과 연대와 상생의 지역정치운동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는 대체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와 문화가 존재했다. 이런 최소 강령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면, 넓게 보아 녹색의 생태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시민사회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주민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등등 국가주의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일으키며 저항해 왔던 사람들 거의 모두를 포괄하면서 지역의 협동사회경제 세력은 지역정치운동의 지역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빼앗긴 인민주권을 탈환해야만 국가를 진정한 주권재민의 공동체 국가, 지역의 연합으로서의 연방주의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서울도 지역이다. 이렇게 해야만 경쟁과 전쟁의 가치가 아닌 협동과 우애, 평화의 가치를 밑바닥 지역의 인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드릴 수 있으며, 그때부터 인민들 스스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or draw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illegible]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illegible]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CDI세미나 2013-9

제5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

---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http://www.cdi.re.kr)

■ 인쇄일 : 2013. 3. 26

■ 인 쇄 : 예로니모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